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연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정희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비전과 방향으로 추진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방법에 의존해 두 정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정책사업 등 3가지를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새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지방대학육성 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조례의 제정,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 및 수도권 대학 편중지원 해소, 국립·사립대학 차등지원원칙 적용,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대학,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사업,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I. 서론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시장경쟁체제의 가속화 및 수도권 의 경쟁력 집중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우수인재들의 지방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대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연구 여건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이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 → 지방대 졸업생 취업난 가중 → 지방대 진학 기피·지역인재 유출의 악순환은 결국 지역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지구지역화(Glocalization) 시대이자,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이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에서 지방대학의 침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대학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주체 중 하나로 육성하는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역대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방대 재정지원사업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누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규모가 적어 실효성은 크지 않았으며, 정부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방대학육성지원법도 결국 제정되지 못하였다.

고등교육 정책기조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누리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학부수준의 교육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육성 등 새로운 재정지원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방대학을 지원하던 주요정책들이 전국단위로 통합되고 전국 단위로 경쟁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대학의 문제, 원인진단, 대책마련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대학 육성정책 관련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분석대상이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거나, 역대정부 육성정책의 변천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비전과 방향으로 추진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분석방법에 의존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정책사업 등 3가지를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해야 할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분석틀

1.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이 연구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소재 대학(인천, 경기 포함) 육성을 추진하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양적 측면의 지역 성장(growth)과 질적 측면의 사회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의 양적성장과 질적 사회구조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지역발전은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인 팽창, 절대적 빈곤의 퇴치, 그리고 각종 불균형의 축소와 같은 후생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구조나 문화의 바람직한 변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지역민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의식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변화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해당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부분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궁

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복지 증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내생적 지역발전(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전략이다. 내생적 지역발전은 국가를 비롯한 지역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이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주도한다. 또한 외부의 자원이나 외부로부터의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이 통제 하에 있는 자원을 투입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지역화된 전략(Regionalized Strategy)’을 추구하며, 그 혜택을 지역에 귀속시키는 발전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이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 산업발전을 꾀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서구와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과거의 중앙주도적 개발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외생적 성장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처럼 내생적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전략으로서 정부·대학 및 연구기관·기업들 간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의 형성을 강조한다(OECD, 1999).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관들 간의 연관관계를 활성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책임을 담당하며, 중앙정부에는 이러한 혁신체계 전체의 조정·촉진·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요청받는다.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급지식과 정보를 생산, 활용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은 비교적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인재를 외부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키움으로써, 지역 간의 ‘창의적인 경쟁’과 ‘민주적 참여’의 원칙 아래서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임승달 외(2004)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첫째,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교육, 공급하여 지역 생산성과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여 지역산업의 특화발전에 기여하며, 우수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산업입지를 촉진시킨다.

둘째, 지방대학은 지역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외지 진학에 따른 하숙비 등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방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연구활동이다. 창의적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이러한 연구기능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방대학은 산학협동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신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부단한 자기혁신기능으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넷째, 사회문화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혁신기능을 들 수 있다. 지방대학은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태도를 습득시켜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학교구성원의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며 대학입지에 따른 외부와의 교류증대로 지역사회가 개방화되어 사회혁신을 일으키도록 한다(임승달 외, 2004: 13, 19).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지방대학이 미치는 효과를 경제활동 결과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지역고교로부터 인재를 선발하여 자체예산과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 기업의 투자에 힘입

어 지역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문화교육, 지역기업, 지역언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각 분야에서 핵심인력으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기관으로 진출한 인력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더 우수한 인재양성에 힘쓰게 되고, 기업에 진출한 인재는 기술혁신 창출로 국제경쟁력 확보와 시장, 시설확장을 가능케 하며, 행정기관과 언론으로 진출한 인재는 지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에 인력과 자금의 수요를 늘려 다시 지역교육, 지역금융을 발전시키고,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또다시 우수인력을 요구하는 순환적·누적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서찬수, 2002: 28).

이처럼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지방대학 문제의 원인, 현상분석,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가운데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수행된 지방대학 육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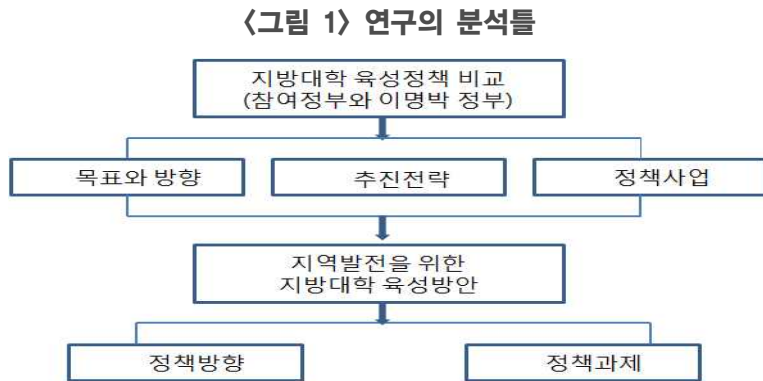
첫째, 지방대학의 차별에 관한 연구(김영철·이민환, 2003; 김한준, 2004; 오호영, 2007) 및 지방대학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개괄적 연구(주철안, 2000; 서찬수, 2002; 정영섭, 2003; 이원일 외, 2004; 임승달 외, 2004; 길병욱 외, 2005; 심건길, 2005; 백종국, 2006; 신희권, 2007; 김희삼, 2008; 임연기, 2009a, 2009b)이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지방대 인재 육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역할당제 실시 및 지역거점대학 육성, 산·학·연·관·민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대학 구조조정 및 조직혁신, 평가와 보상시스템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 특성화 및 산학협력 연계 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둘째, 중앙정부 개별 정책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손소영 외, 2001; 선우명호, 2002; 오세정 외, 2003; 김용학·오세정, 2005; 이귀로 외, 2005; 이용준 외, 2005; 장홍근·전재식, 2005; 반상진 외, 2006; 김병주, 2007; 류장수 외, 2007; 백일우·박경호, 2007; 이삼호 외, 2007; 기영석, 2008; 유현숙 외, 2008; 박경호, 2010; 박성익 외, 2010; 오범호, 2010; 김병주, 2011; 류장수, 2012; 이정열, 2012)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된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과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누리사업을 집중분석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시기 새로 도입된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백성준·채창균, 2009; 박경호, 2010; 강홍준, 2012; 박상규, 2012)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박재민 외, 2009; 박경호·장덕호, 2012; 홍민식, 2012)등이 포함된다.

셋째,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박선형, 2003; 주철안, 2003; 조선일, 2004; 임연기, 2009a; 김병주, 2010; 신현석 외, 2011; 김수경, 2012)이다. 주로 당대 정부 정책의 특징을 평가하거나 역대 정부 정책을 비교평가하는 연구들로, 역대 정부 비교분석 연구

는 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대정부 육성정책의 변천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분석시기 역시 참여정부 시기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비전과 방향으로 추진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 정책사업 등 3가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Ⅲ.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1. 참여정부

1) 목표와 방향

참여정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한마디로 ‘지방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발전-자립형 지방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혁신의 활성화 → 지역산업의 발전 →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 → 인재의 지방정착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기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과제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즉,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관련해 4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 특히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RIS)’이 강조되었으며,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서 지방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

역의 대표 브랜드화'하고 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면한 지방대학 문제와 지역균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조선일, 2004: 215).

2) 추진전략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의 지역혁신전문위원회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주재로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여기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대학발전기획팀을 설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해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구상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인재육성프로젝트(안)을 구상해 지방대학전문가협의회, 8개 권역별 240여개 대학 전문대학의 의견수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7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이 성안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각각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등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지방과학 진흥 및 지역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주철안, 2003: 167). 이들 부처의 산·학·연·관 협력 관련정책은 공통적으로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역개발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즉 참여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의 과제를 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에 기초한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3) 정책사업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이며(표 1 참조), 이 가운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역점사업은 누리사업이다.¹⁾

1)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사업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 대형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참여정부 고유의 사업이 아니며 누리사업처럼 지방대학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표 1〉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정책사업

사업명(사업기간)	주요 내용	사업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04년 ~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한 참여정부 핵심사업.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 지원. - 대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시·도별 전략산업 분야 인력 양성. - 중형과 소형: 지역 산업·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 지원대상: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총 1조2,400억원 ·‘04년 2,200억원 ·‘05년 2,400억원 ·‘06년 2,600억원 ·‘07년 2,600억원 ·‘08년 2,600억원 * 109개 학교 131개 사업단(대형 37개, 중형 33개, 소형 61개), 19만여명 지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04년 ~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육성. - 권역별 13개 대학에 교육체제개편·기술개발·인력양성·기반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총 2,060억원 ·‘04년 400억원 ·‘05년 440억원 ·‘06년 440억원 ·‘07년 300억원 ·‘08년 480억원 * 13개 사업단 지원(전국 8대 권역 13개 대학)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04년 ~ ‘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특화분야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미래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지역의 중추적인 혁신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 신청대상: 4년제 이상의 이공계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권역별 1개씩 총 10개의 지방연구중심대학사업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00억원씩 4년간 총 400억원(사업단별 25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사업 (‘06년 ~ ‘13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특성화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사업. - 지원분야: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지원사업(사업단, 사업팀)/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연계된 지역 우수대학원 지원사업(사업단, 사업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고급전문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간 총 1조8,000억원 ·‘06년 2,900억원 ·‘07년 2,895억원 ·‘08년 2,721억원 ·‘09년 2,659억원 ·‘10년 2,370억원 ·‘11년 2,370억원 ·‘12년 2,045억원 * 74개 대학 243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 지원

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 정책정보실에서 재구성.

(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누리사업)
(‘04년 ~ ‘08년)

① 개요

지방대 특성화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토대 마련을 목표로 사업예산을 비수도권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 내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에 의해 우수한 사업단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

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이고, 참여분야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계열 등이다. 지원유형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했는데, 대형사업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광역시·도별 지역발전계획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였다.

② 평가지표

연차평가와 중간평가로 나뉘어지며 연차평가는 요건심사 지표와 본심사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요건심사는 대학전체와 사업팀의 교원확보율, 입학정원 대비 정원 내 신입생 등록률, 사업팀 취업률, 필수 대응자금 확보율, 재정집행의 목적 외 부정사용 비율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모든 사업단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필수성과지표와 각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정해 달성하도록 한 선택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필수성과지표는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생취업률 등 세 가지 지표이고, 선택성과지표로 많이 설정된 것은 교육과정개편수, 산학협력건수, 인턴십 참가 등의 지표이다.

③ 지원내용

사업 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5년간 투입된 예산총액은 1조 2,400억원이며,²⁾ 총 109개 학교, 131개 사업단(대형 37개, 중형 33개, 소형 61개), 19만여명의 학생에게 지원이 되었다. 사업단에 직접 지원된 예산 1조 1,906억원의 지역별 지원규모는 <표 2>와 같다.

<표 2> NURI사업 지원예산의 지역별 규모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강원	15,618(7.3)	16,908(7.2)	18,446(7.4)	18,338(7.4)	17,605(7.1)
경남	17,180(8.0)	23,218(9.9)	26,657(10.7)	26,150(10.5)	26,551(10.8)
광주/전남	32,393(15.2)	35,932(15.4)	39,527(15.9)	41,772(16.8)	42,258(17.1)
대구/경북	41,192(19.3)	41,965(18.0)	44,432(17.9)	42,905(17.3)	43,076(17.5)
대전	13,723(6.4)	18,143(7.8)	20,981(8.5)	20,769(8.4)	21,083(8.5)
부산	25,213(11.8)	28,285(12.1)	28,064(11.3)	29,476(11.9)	29,184(11.8)
울산	6,480(3.0)	5,900(2.5)	5,778(2.3)	5,819(2.3)	5,757(2.3)
전북	17,339(8.1)	19,963(8.5)	19,813(8.0)	18,100(7.3)	18,296(7.4)
제주	7,646(3.6)	7,406(3.2)	8,638(3.5)	8,877(3.6)	8,859(3.6)
충남	21,453(10.0)	22,924(9.8)	20,685(8.3)	21,609(8.7)	20,056(8.1)
충북	15,265(7.1)	12,856(5.5)	15,094(6.1)	14,834(6.0)	14,126(5.7)
합계	213,500(100.0)	233,500(100.0)	248,114(100.0)	248,649(100.0)	246,851(100.0)

자료: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류장수(2012), 121의 재인용.

2) 이 예산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예산(4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사업의 순수사업예산은 1조 1,957억원이다. 그리고 순수 사업예산비 중에서 누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연구재단 자체 경비 등의 예산(약 50억원)을 제외한 1조 1,906억원이 사업단에 지원된 금액이다(류장수, 2012: 121)

④ 성과와 한계

지원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지방대학에 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 신입생 충원, 학생 취업을 제고 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러나 선행연구들(류장수 외, 2007; 기영석, 2008; 김희삼, 200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되었다. 첫째, 누리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지역업체로의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역산업이 전무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경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산학연관 협력교류에 대한 양적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하였다. 산업체는 정보기술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동연구, 인턴십 및 현장기술에 한계를 보였다. 셋째, 사업단 단위의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유사한 성격의 중복사업이 부처별로 또는 부처 내에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산업과 관련된 학과의 경우 중복수혜의 여지가 있었다.

평가기준의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 사업단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전체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여 사업단의 노력과 의지와는 별개로 대학전체 실적미달에 따라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축소지표는 오히려 누리사업단의 정원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이승복, 2009; 34).

〈표 3〉 누리사업 필수성과 지표의 연도별 추이(사업팀)

단위: %

	선정시	1차년도 (2005)	2차년도 (2006)	3차년도 (2007)	4차년도 (2008)	5차년도 (2009)	증가율
교원확보율	63.8	75.9	80.7	85.0	91.9	93.8	+30.0
신입생충원율	96.3	100.0	100.0	100.0	100.0	99.0	2.7
학생취업률	58.9	63.1	67.3	71.3	74.7	75.4	16.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2)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사업('06년 ~ '13년 2월)

① 개요

분야별 특성화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원분야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지원사업과, 2단계에서 신설된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연계된 지역 우수대학원 지원사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고급전문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② 평가지표

교육, 연구, 대학원특성화, 산학협력, 산학연공동사업단, 지역우수대학원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교과과정 운영의 우수성, 연도별 석·박사과정생 양성, 대학원생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실적 등이, 연구부문에서는 참여교수 논문실적, 1인당 정부연구비 수주실적 등이 평가되었다. 또, 지역우수대학원 부문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운영실적, 지자체 연구비 및 각종 지원금 수주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③ 지원내용

7년간 총 1조8,000억이 지원된³⁾ 2단계 BK21사업은 전국단위와 지역단위를 구분해 신청 및 선정하였다. 전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사업(핵심 포함)에는 629개 사업단(팀)이 신청해 356개 사업단(팀)이 선정되었고,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핵심 포함)에는 340개 사업단(팀)이 신청해 213개 사업단(팀)이 선정되었다. 지원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157개 사업단 1,738억원(35개교), 인문사회분야 61개 사업단 280억원(20개교), 전문서비스분야 25개 사업단 213억원(17개교), 핵심분야 325개 사업단 574억원(71개교)이다. 2단계 BK21 예산배분 현황과 대학별 지원액 현황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2단계 BK21 예산배분 현황

구분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의치의학	MBA	핵심-과학기술	핵심-인문사회	센터구축	글로벌캠퍼스
전국(%)	11.9	34.4	7.8	5.5	1.6	10.2	1.8	1.6	0.7
지역(%)	3.3	10.9	2.0	0.4		6.6	1.3		

자료: 원용진(2006), 271.

<표 5> 2단계 BK21 대학별 지원액 현황

순위	대학명	선정결과					지원액 (백만원)
		과학기술	인문사회	전문서비스	핵심	합계	
1	서울대학교	15	10	3	16	44	49,728
2	연세대학교	13(1)	9	3	8(2)	33	25,532
3	고려대학교	11(1)	9(1)	2	6(1)	28	20,091
4	성균관대학교	10	8	2	8	28	15,874
5	부산대학교	13	5	1	14	33	15,872
6	한양대학교	9	-	1	18	28	15,448
7	포항공과대학교	8	-	-	1	9	11,939
8	경북대학교	7	1	2	5	15	11,652
9	한국과학기술원	8	1	-	7	16	10,619
10	전남대학교	7	4	2	14	27	8,822
11	인하대학교	4	1	1	6	12	6,819
12	경희대학교	3	-	1	15	19	6,509
13	이화여자대학교	2	2	1	13	18	6,266
14	충남대학교	6	-	1	8	15	6,200
15	충북대학교	6	1	-	2	9	4,976
16	전북대학교	3	2	1	6	12	4,907

3) 1단계 BK21 사업은 '99~'05년까지 7년간 총 1조 3,421억이 지원되었다.

17	건국대학교	3	-	1	10(1)	14	3,980
18	경상대학교	4	-	-	4	8	3,894
19	아주대학교	2	-	1	5	8	3,228
2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	-	-	-	1	3,187
21	서강대학교	2	-	-	8	10	2,840
22	조선대학교	1	-	1	8	10	2,457
23	강원대학교	1	-	-	9	10	2,337
24	광주과학기술원	4	-	-	-	4	2,244
25	중앙대학교	-	1	-	8	9	2,033
26	서울시립대학교	-	-	-	12	12	1,980
27	영남대학교	2	-	-	5	7	1,788
28	원광대학교	1	-	-	3	4	1,704
29	울산대학교	2	-	-	3	5	1,591
30	부경대학교	1	-	-	6	7	1,570
31	명지대학교	1	-	-	3	4	1,352
32	동아대학교	1	-	-	4	5	1,290
33	세종대학교	-	-	-	7	7	1,290
34	홍익대학교	-	1	-	2	3	1,222
35	인제대학교	2	1	-	3	6	1,202
36	가톨릭대학교	-	-	1	-	1	1,053
37	숙명여자대학교	1	-	-	2	3	1,010
38	송실대학교	-	1	-	3	4	988
39	국민대학교	-	-	-	5	5	932
40	단국대학교	-	-	-	5	5	89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6. 4. 26).

④ 성과와 한계

2단계 BK21 육성사업은, 지역 우수대학원 사업을 신설하고 1단계 사업에 비해 지방대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대학지원의 편중문제를 드러내었다. 위의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상위 10위 대학 가운데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곳에 불과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곳이 전체 지원금액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는 큰 방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특정대학과 특수목적대학인 과학기술원에 지원이 집중된 결과 대학 간 불공정 경쟁관계와 독과점적 대학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⁴⁾

또한 <표 4>는 이공계와 인문사회 계열 간의 지원불균형 문제를 보여준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소규모 지원에 그쳐 학문재생산이라는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 BK21 지원금을 분석한 최순영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김병주(2007)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이 55: 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대학 가운데 다른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 특수목적대학을 수도권대학으로 편입시켜 계산하면 69:31로 나타나, 지방대학들이 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병주, 2007: 45).

(3)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04년 ~ '08년)

① 개요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육성하는 사업이다. 또, 대학을 통해 산업집적지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산업단지의 연구기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의 정합성, 산업권역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권역을 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북권, 광주·전남·제주권 등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원하였다. 또, 일반대학은 산학협력제도 도입 및 교육체제 개편에, 산업대학은 산학협력 활성화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등 별도로 분리하여 선정·평가하였다.

② 평가지표

대학개편,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3분야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학개편 부문에서는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반영비율, 교수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이, 그리고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특성화 학과 참여학생수, 현장실습 참여학생수,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수, 미취업자 인턴십 참여인력수가 평가지표로 포함되었다. 기업지원 부문의 평가지표는 가족회사 확보수, 산학협력협의회수, 기술개발과제수, 기술지도건수, 공용장비산업체지원건수, 산업체 재직자 교육참여인력수이다.

③ 지원내용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매년 200억원씩 400억원을 투자하여 5년동안 총 2,06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과의 연계,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가 각각 5%씩의 현금대응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전국 8대 권역 13개 대학(한양대, 강원대, 영동대, 호서대, 전주대, 춘천대, 경북대, 부산대 등 일반대 8개, 서울산업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밭대, 상주대, 동명대 등 산업대 5개), 13개 사업단이 지원을 받았다.

④ 성과와 한계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지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교육과 학사운영 등의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성화 학과 육성, 계약형 학과 설치·운영, 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산업계 인력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산업현장의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사업인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 산학협력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산학협력체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산업과 혁신기반의 취약성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산학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환경을 파악해 개선하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04년 ~ '07년)

① 개요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특화 미래원천기술분야 개발과 연계한 지방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방향은 사업단별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비용을 지원하고 3년 단위 다년도 계약을 통해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지역특화가 가능한 미래원천기술에 대해 연간 30여개 규모 세부과제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비용이 지원규모의 70% 내외가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지역특화 미래원천기술과 연계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연구장비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20% 내외, 해당 특화분야의 전공지식과 기술경영능력을 보유한 석박사급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10%내외가 되도록 하였다.

② 평가지표

기획부문에서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을, 집행부문에서 사업관리 및 사업집행의 적절성과 성과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결과부문에서는 특허등록건수, SCI급 학술지 게재건수,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력건수, 기술료 징수 실적, 인력양성 배출실적이 평가대상이다.

③ 지원내용

지원규모는 사업단별 30억원으로, 정부지원 25억원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었다. 당초 권역별 1개씩 총 10개의 지방연구중심대학사업단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산대 차세대물류IT기술연구사업단, 전북대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충북대 충북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 전남대 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 등 4개 사업단이 지원을 받았다.

④ 성과와 한계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과학기술 분야를 진흥시켜 수도권 및 대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예산규모가 적어 파급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지방대학 학부 졸업생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중간 단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큰 틀 속에서 사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단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술료 징수 등 자체 사업단 유지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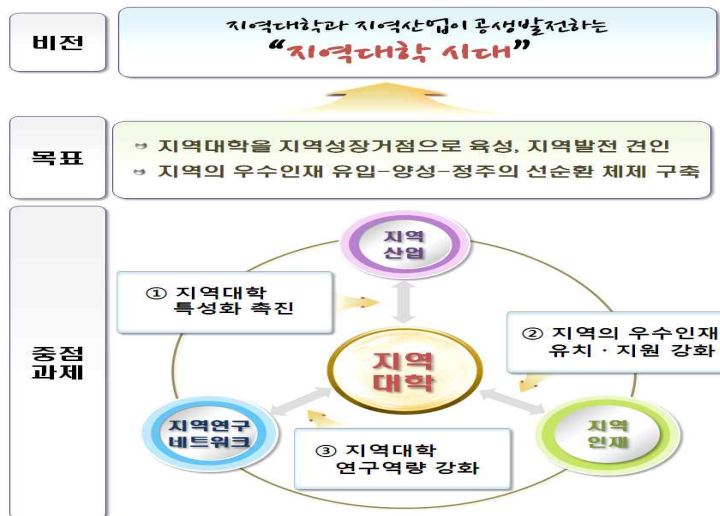
2.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1) 목표와 방향

큰 틀에서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지원 기초를 유지했으며,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기조인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맞춰 재정지원 사업체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역대 정부와 달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수월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지방대학을 주요사업의 수혜자로 선정한 참여정부의 지원방식과 차별화하여 지구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대한 지원방식을 취하였다(신현석 외, 2011: 213).

집권말기에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발전을 적극 연계시키는 지역대학 육성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즉,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한편,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림 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6월,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대학 발전방안’에서 말하는 지역대학이란 서울을 제외한 지역소재 대학으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대학(비수도권 대학) 집중육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⁵⁾

〈그림 2〉 이명박 정부 지역대학정책 비전과 방향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지역대학 발전방안」 자료집.

5)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소재 대학을 지역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학에는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대학이 포함됨으로써 비수도권 대학을 통칭하는 지방대학과는 다른 개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 추진전략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첫째, 참여정부의 누리사업을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이관하고, 수도권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해 지원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의 동시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관치 없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목표로 ‘포퓰러 펀딩(formula funding)’방식을 도입하고, 지원대학에 사업비를 총액으로 교부하였다.⁶⁾ 포퓰러 펀딩은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공식에 의해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셋째, 대학원과 학부수준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교수·연구자 및 학생 직접지원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넷째, 사업별로 기본 지원사업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⁷⁾ 여섯째, 재정지원 효율성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정책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계개혁을 추진하였다.⁸⁾

3) 정책사업

대학원 수준에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을 신설하고, 학부수준의 지원사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학 지원 정책사업은 <표 6>과 같다.

6) 지원된 예산은 용처의 지정 없이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되어, 대학의 장의 책임아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블럭 펀딩).

7)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취업률 지표 반영 비율은 25%,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시 취업률 반영비율 20% 등이며, 이외에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전문대학생 및 대학생 해외인턴십 등이 취업연계형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8) 이를 위해 외부자금 유치 및 대학 내 민간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2009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사립대학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6〉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정책사업

사업명(사업기간)	주요 내용	사업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09년 ~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대학·전문대학 각 5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도입됐으나, ‘09년 누리사업, 수도권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함. 2010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원화해 300억원 규모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을 신설함. 즉, 교육역량강화지원과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함. - 대학발전의 핵심지표가 반영된 포물러에 의해 지원대학을 선정, 포괄적 재정지원(포물러·블럭 펀딩)방식을 적용함. - 지원대상 대학: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 ‘10년부터 수도권과 지방대학 회계를 구분해 지원함(수도권: 일반회계/ 지방: 광특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역량강화 지원부문 4년간 총 1조980억원 ·‘09년 2,649억원(수도권 699억원/지방 1,950억원) ·‘10년 2,900억원(수도권 800억원/지방 2,100억원) ·‘11년 3,020억원(수도권 860억원/지방 2,160억원) ·‘12년 2,411억원(수도권 770억원/지방 1,641억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부문 3년간 총 1,500억원 ·2010년 300억원(11개교)/2011년 600억원(22개교)/2012년 600억원(25개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08년 ~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역량 높은 해외학자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하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지원분야: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융합기술, 우주·국방, 외해성 및 돌파형기술, 에너지과학, 바이오제약, 인지과학(뇌과학)분야와 금융수학·금융공학, 인체조직개발 등 이공학 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학문간 융복합분야, 인문사회와 이공학 분야간 융복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8,250억원 ·‘08년 1,250억원 ·‘09년 1,250억원 ·‘10년 1,591억원 ·‘11년 1,240억원 ·‘12년 667억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09년 ~ ‘12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지정과 연계, 선도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해 중견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대학: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2년 ~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개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51개 대학에 1,700억원, 30개 전문대학에 120억원 등 총 1,820억원 지원. - ‘13년 66개 대학 3,180억, 40개 전문대학 500억원 등 총 3,800억원 지원 예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보도자료에서 재구성.

(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09년 ~ 계속)

① 개요

학부수준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신설됐으나, 2009년도에 누리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하였다. 기존 지원사업들이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반면, 이 사업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

시된 지표를 활용해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포물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 2010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원화해 300억원 규모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역량강화지원과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② 평가지표

대학발전의 핵심지표가 반영된 포물리(공식)에 따라 지원대학을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포물리는 교육지표와 재원배분 포물리로 구성된다. 교육지표 포물리는 성과지표(50%)와 여건지표(50%)로 나뉘어진다. 성과지표는 취업률지수 25%, 재학생 충원율 25%이며, 여건지표는 전임교원확보율 10%, 장학금지급률 20%, 1인당 교육비 20%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성과지표 속에 국제화지표를, 2010년에는 여건지표 속에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성과지표 속에서는 총장직선제 개선, 기성회계 건전성 등 선진화 지표가 포함되었다.

③ 지원내용

교육역량강화지원 분야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조 980억원이 지원되었고, ACE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50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대학 현황과 규모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현황(2012)

단위: 개교,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1만 이상	1만 미만	교원 양성대	수도권			지방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신청 대학	13	16	11	21	14	7	17	26	18	143
선정 대학(%)	9 (69.2)	15 (93.8)	11 (100)	16 (76.2)	8 (57.1)	4 (57.1)	12 (70.6)	13 (50.0)	9 (50.0)	97 (67.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4. 13).

〈표 8〉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도권	120억/4개교	201억/7개교	200억/8개교
지방	180억/7개교	390억/15개교	400억/17개교
계	300억/11개교	600억/22개교	600억/25개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5. 10).

④ 성과와 한계

교수 개인이나 개별 사업단의 역량보다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므로 결과

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대학이 유리하며, 대학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오범호(2010)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각각 65.2%와 60.9%, 지방 대규모 대학은 대상대학의 75.9%와 72.4%가 지원받은 반면, 소규모 대학은 31.8%, 25.0%에 불과해 규모에 따라 선정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2012년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대규모 대학은 각각 76.2%와 70.6%가 지원받은 반면, 소규모 대학에 대한 지원은 각각 57.1%와 50.0%에 그쳤다. 또한, 교육여건과 성과가 동일한 경우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행 사업비 배분방식은 우수한 교육여건과 성과가 있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과 특정한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오범호, 2010: 172).

박경호(2010)는 사업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의 비교분석자료를 통해, 1차년도에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에서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에 비해 더 많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경호, 2010: 78).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공시된 지표를 활용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포퓰러 방식을 취함에 따라 참여대학이 대규모 대학에 치중돼 있어, 이들 대학의 교육역량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참여대학에 비해 낮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08년 ~ '13년)

① 개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식을 ‘대학·기관단위 지원’보다 ‘교수·연구자 개인중심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방대학원 특화분야를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사업(400억원)’ 및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지원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50억원)’과 통합해, 해외학자 유치사업인 WCU 사업으로 변경시켰다. 이전 정부의 BK21이 선택과 집중방식을 취하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면, WCU는 이들 대학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더욱 강화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성장동력분야와 이공학 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학문간 융복합분야, 인문사회와 이공학 분야간 융복합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② 평가지표

교육성과(15점), 연구성과(30~35점), 해외학자 관리·활용성과(20~40점), 달성도 및 기대효과(30점)로 구성돼 있다. 교육성과 지표는 교육과정의 구성·운영 실적과 대학원생 지원 실적이며, 연구성과 지표는 참여교수 연구실적과 학술활동 성과 등이다. 또, 해외학자 관리·활용성과에는 해외학자 성과책임제 운영 실적 및 특강·세미나 등 교내외 교육·학술활동 실적이 포함된다.

③ 지원내용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8,2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1월 현재 30개 대학 119개 과제가 지원되었다.

〈표 10〉 WCU 사업 지원현황(2012. 1월 기준)

유형	대학수			과제수			해외학자수		
	전국	지방	소계	전국	지방	소계	전국	지방	소계
유형 1	13	7	19	27	7	34	174	35	209
유형 2	9	10	18	25	16	41	38	29	67
유형 3	14	8	21	32	12	44	33	12	45
합계	17	17	30	84	35	119	245	76	321

주1) 사업기간: '08년~'13년

주2) 지원예산: 총 8,250억원 ('12년 예산-667억원)

주3) 대학수의 합계가 맞지 않은 것은 중복지원 받은 대학을 제외했기 때문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④ 성과와 한계

수도권 주요대학과 이공계열에 대한 편중지원이 이 사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방대학과 인문사회계열만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했으나 편중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업 지원액 가운데 서울대가 346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예산의 21.9%를 차지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157억원(10.0%), 포항공대 152억원(9.6%), 성균관대 109억원(6.9%) 등 상위 10개 대학들이 지원받은 예산이 72.7%를 차지하였다. 상위 10개 대학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그리고 국립대인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대학이었다(표 11 참조).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특성화대학은 다른 지방대학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10개교 가운데 지방대는 부산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 WCU 사업 지원대학 상위 10개교(2009년 기준)

단위: 억원, %

순위	지역별	학교명	금액	비율
1	수도권	서울대	345.8	21.9
2	지방 *	한국과학기술원	156.9	10.0
3	지방 *	포항공대	151.8	9.6
4	수도권	성균관대	109.2	6.9
5	수도권	연세대	84.7	5.4
6	수도권	이화여대	76.2	4.8
7	수도권	고려대	68.2	4.3
8	지방 *	광주과학기술원	57.7	3.7
9	수도권	한양대	51.5	3.3
10	지방	부산대	44.8	2.8
상위 10개 대학 합계			1,147.0	72.7
전체 대학 합계			1,577.2	100.0

주)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므로 지방대학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b), 국정감사 제출자료.

- (3)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09년 ~ '12년 4월)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2년 ~ '17년)

① 개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경제권의 4년제 대학에 대하여 2009년부터 1,000억원(신규 500억원, 지방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중 500억원 이관), 5년간 총 5,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한 선도산업으로서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구분해 지원하였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연구단 지원사업 등을 2012년부터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말기에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지역대학 특성화' 전략을 중점추진하면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였다.

② 평가지표

LINC의 핵심성과지표는 취업률,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교수업적평가시 산학협력실적반영 비율, 산학협력단운영 수익률,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현장실습 이수학생비율, 학생창업교육 및 지원현황, 중소기업기술지원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에는 대학별 1차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정량평가(35%), 정성평가(60%) 및 학생·기업 만족도 조사(5%) 결과를 집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③ 지원내용

LINC는 지역·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업체 및 기술개발·협력 등 기업 지원으로 구분됐으며, 2012년 51개 대학(기술혁신형 14개교, 현장밀착형 37개교)과 30개 전문대학(산학협력 선도형 10개교, 현장실습 집중형 20개교)등 총 8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권역별, 유형별 선정대학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산학협력선도대학의 권역별, 유형별 선정대학 현황

단위: 개교

권역별 \ 유형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합계
수도권	2	5	7
충청권	3	8	11
호남권 + 제주권	3	8	11
대경권 + 강원권	3	8	11
동남권	3	8	11
합계	14	37	5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3. 28).

④ 성과와 한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지방대학 지원정책인데도 이전 정부의 특화산업 내역을 변경시키⁹⁾ 대학의 집중투자 분야를 변경시키는 혼란을 야기했다. 또 사업집행단계에서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예산 500억원이 이관돼 1,0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선정대학도 늘어나면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대학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즉, 지역거점 대학 육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수 지방대학에 지원키로 한 예산을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점 국립대 및 대규모 사립대학’들과 지방 군소규모 대학 사이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안민석, 2010: 32).

그런가 하면 선도산업 관련 특정학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역 전략산업 등 광역권 내 산업수요가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한계도 드러났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5.6)

3. 종합평가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역대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방대 재정지원사업인 누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규모가 적어 실효성은 미흡하였으며,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은 제정되지 못하였다.¹⁰⁾ 따라서 현재까지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관치의 철패, 형평성 보다는 수월성과 효율성 추구, 경쟁력 중시, 기관 단위 재정지원에서 개인 단위 재정지원 등으로 참여정부와 차별성을 보였다. 따라서 지방대학을 지원하던 주요정책들이 전국단위로 통합되고 전국 단위로 경쟁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역대정부와 달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정부출범 초기부터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 말기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¹¹⁾, 지역대학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소재 대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지역의 지방대학을 주요 수혜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여러 정책사업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

9) 충청권은 의약바이오산업과 New IT 산업,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부품소재산업, 동남권은 수송기계산업과 융합부품소재산업, 대경권은 IT 융·복합산업과 그린에너지산업, 강원권은 의료융합산업과 의료관광산업,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으로 각각 변경했다.

10)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대학의 지역별·권역별·영역별 특성화 유도, 지방대학육성지원법제정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수·학생의 교류 학점의 상호인정 등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계 강화, 지방대학의 R&D 네트워크에 정부지원비율 대폭 확대, 공공부문에 인재지방할당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노무현 후보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자료집, 2002).

11)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내 ‘산학협력관살’을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체계적 지역대학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과’를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지방대학 육성사업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해 추진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도권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은 다소 늘어났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과 이에 해당하는 이전 사업인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23.5%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26.4%로 늘어났다. 반면 지방대학은 76.5%에서 소폭 73.6%로 감소하였다.¹²⁾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새로 도입한 포물러 보조금방식은 개별 사업단의 역량보다는 대학 자체의 역량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수도권 대학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은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전체 교과부 소관 대학재정 지원액 중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로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47.6%에 비해 4.8%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대학은 2007년 52.4%에서 47.6%로 4.8% 낮아지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수도권과 지방대학 지원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13〉 2007년 대비 2009년 교과부 대학재정 지원금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대학수(A)	2007년 재정지원			2009년 재정지원			
		지원액(B)	비율	대학당(B/A)	지원액(C)	비율	대학당(C/A)	
수도권	서울	39	445,107	41.5	11,413	857,826	45.6	21,996
	서울외	33	65,477	6.1	1,984	128,011	6.8	3,879
	소계	72	510,584	47.6	7,091	985,837	52.4	13,692
지방	광역시	34	210,543	19.6	6,380	317,471	16.9	9,337
	광역시외	83	350,921	32.7	4,228	576,679	30.7	6,948
	소계	117	561,463	52.4	4,840	894,149	47.6	7,642
합계	189	1,072,048	100	5,702	1,879,986	100	9,947	

주1) 대상: 국·공립·사립 일반대, 산업대, 방송통신대 189교(아시아대, 중원대 제외/ 울산과학기술대는 2007년 제외)

주2) 국립대 일반 지원, 교육대 지원, 과기원 운영비 지원, 대학생 장학사업, 미취업졸업생 지원 사업 제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b),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부의 편중지원은 대학별 지원액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과부 대학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10개 대학은 2007년 전체 지원금의 47.0%를 지원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에는 49.8%로 2.8% 증가하였다. 서울대는 2007년 전체 지원액의 12.6%에서 2009년에는 14.4%로 1.8% 늘어났다(표 14 참조).

12) 2007년 지원금액은 수도권 30개 대학 645억2,500만원과 지방 61개 대학 2,105억1,800만원이며, 2010년 지원 금액은 수도권 29개 대학 632억3,100만원과 지방 51개 대학 1,766억1,200만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표 14〉 2007년 대비 2009년 교과부 대학 재정 지원 상위 10개 대학

단위: 백만원, %

순위	2007년				2009년			
	대학명	지역	금액	비율	대학명	지역	금액	비율
1	서울대	서울	134,866	12.6	서울대	서울	270,086	14.4
2	부산대	부산	54,783	5.1	포항공대	경북	119,624	6.4
3	연세대	서울	50,893	4.8	연세대	서울	102,276	5.4
4	고려대	서울	47,016	4.4	고려대	서울	90,619	4.8
5	포항공대	경북	41,985	3.9	부산대	부산	67,237	3.6
6	성균관대	서울	39,871	3.7	성균관대	서울	66,414	3.5
7	한양대	서울	38,183	3.6	경북대	대구	63,348	3.4
8	전남대	전남	37,006	3.5	한양대	서울	60,034	3.2
9	경북대	대구	35,474	3.3	전남대	광주	51,032	2.7
10	충남대	대전	21,937	2.1	이화여대	서울	46,215	2.5
합계	상위 10개 대학		502,015	47.0	상위 10개 대학		936,885	49.9
	상위 20개 대학		688,356	64.4	상위 20개 대학		1,255,543	66.8
	상위 30개 대학		796,568	74.5	상위 30개 대학		1,447,500	77.0
	전체(188교)		-1,068,833	100.0	전체(188교)		1,879,490	100.0

주1) 대상: 국·공립·사립 일반대, 산업대, 방송통신대 189교(아시아대, 중원대, 한국정보통신대 제외).

주2) 국립대 일반 지원, 교육대 지원, 과기원 운영비 지원, 대학생 장학사업, 미취업졸업생 지원 사업 제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b), 국정감사 제출자료.

한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설립목적, 예산구조, 재정수입원, 조직특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시장형 방식, 즉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국·사립 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도 못하였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발전을 지방대 육성의 주요목표로 내걸었지만 이처럼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특성화보다는 동일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립대학은 이공계 인재의 양성과 함께 사회적 수요는 적지만 계승해야 할 중요한 학문분야,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교육연구, 그리고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연구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사립대학들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각각의 역할수행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김수경, 2012: 10). 또한, 이들 국가는 일반지원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평가와 경쟁을 통한 차등 지원 사업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관지원사업(경상지원)과 특별프로그램지원사업 비중이 7대 3이며, 영국은 전체 교부금 가운데 특수목적지원 비율이 6.4%(2006~200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적으로 특수목적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국가는 보기 드물다(안민석, 2010: 53).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사업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누리사업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강력히 추진해왔으며 유사 이래 지방대 육성을 위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방대학 육성사업이 정권교체 이후 중단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상실하고 있다.

〈표 15〉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비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목표와 방향	- 지방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발전·자립형 지방화 -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에 있는 지방대학을 집중육성.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방대학이 아닌 지역대학(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육성에 초점.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재정지원원칙으로 '선택과 집중' 채택	- '선택과 집중' 전략 본격화 - 집권 후반기부터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지역대학 특성화' 전략 중점추진.
주요 정책사업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등 - 중점사업: NURI사업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인재양성산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등 - 중점사업: LINC사업(집권 말기)
특징과 한계	- 지방대학을 사업의 주요 수혜자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 -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일한 경쟁구도 아래 두고 '경쟁과 지원'을 연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규모가 적어 실효성 미흡. -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은 제정되지 못함.	- 수월성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대학 간 경쟁 강화.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일한 경쟁구도 아래 두고 지원 - 집권 말기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 추진했지만 지역대학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소재 대학'으로 규정, 비수도권지역의 지방대학을 주요 수혜자로 선정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 편중지원 심화, 지방대학 지원 감소

IV. 새 정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은 여전히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방의 위기'이며, 지방의 위기는 국가경쟁력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위기문제는 지방대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오랫동안 계속된 중앙집권·수도권 집중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즉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일자리, 인구 등의 집중현상 때문에 발생하였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다시 인구와 산업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는 오늘날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한 특성화된 지역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맞먹을 정

도로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권역의 거점대학들이 수도권 대학과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펴야 한다.¹³⁾

또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일회적,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른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정권교체와 함께 중단되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은 이루지 못한다.

2. 정책과제

1)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지방대학육성조례(가칭)의 제정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재원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의 제정을 통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고, 관련정책 수립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기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되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법률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012년 11월 23일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¹⁴⁾

향후 제정될 법에서는 지방대학 연구·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마련, 지방대학육성위원회와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의 설치, 정부의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위촉시 지방인사 일정비율 이상 참여,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인력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목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지원 의무화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육성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아래 지방대학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지방대학 관계자의 참여 의무화, 지역사회의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대학 지원협의회(가칭) 구성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 등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도 선행되어야 한다.

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전략 속에 ‘지방대학 지원 확대’가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14)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방대학육성위원회 및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채용목표제 등을,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30%이상 채용,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지방대학 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자체 산하 지방대학 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 및 수도권 대학 편중지원 해소

수도권 대학과 구분해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에 대해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지방대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해당 대학들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시된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촉진정책’으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편중지원이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 편중지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교육여건의 격차로 나타나 또다시 편중지원을 불러오는 악순환구조를 거듭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대학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것이 아니라 13개 비수도권지역 대학에 대한 집중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보다 수도권대학과 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포물리 펀딩 지원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3) 국립-사립대학 차등지원원칙 적용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립대학은 국가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사립대학은 각각의 설립목적과 존립환경이 다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현재처럼 동일한 경쟁구도 아래 두고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므로 재정지원의 목적과 방식에서 차등지원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재정지원 방향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쟁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선정 및 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별 설립목적에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립대학 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양극화 해소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 권역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들을 육성함으로써 인재와 자본의 지역정착 → 교육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소득 증가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의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한 ‘캘리포니아대학 모델’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백종국(2011)에 따르면, 1960년대 캘리포니아주는 주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평생교육대학 등 세 층의 특성화된 대학체계를 갖도록 마스터플랜을 작성, 각 캠퍼스별 특성화 영역에 막대한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현재 세계 100위권 대학을 10개나 보유함으로써, 경제력이 비슷한 텍사스 주의 1개 보다 월등히 우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백종국, 2011: 57). 캘리포니아 모델은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하되,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수도권 명문대학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유리한 우리나라의 ‘선택과 집중’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재정 확대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2007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투자 비율은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고, 이는 고등교육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⁵⁾ 고등교육예산 중 대학재정 배분사업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1년 20.2%였으나 2012년에는 15.9%로 급감하고 있다(김수경, 2012: 22). 정부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족한 재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대학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평균 비율인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2010년 고등교육 재정확충계획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재육성 정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인재육성정책을 수립, 부처 간 사업을 조율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총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안민석, 2010: 56). 다음으로 단계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¹⁶⁾

V. 결론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대 육성정책을 펴왔으나 고등교육 전체예산의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

15)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 비교(07)〉

(단위: %)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정부재원	1.0	0.6	1.0	0.7	0.5	0.9	1.2	1.2	1.6
민간재원	0.5	1.9	2.1	0.6	1.0	0.2	0.2	0.1	0.1
계	1.5	2.4	3.1	1.3	1.5	1.1	1.4	1.3	1.7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0(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값으로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단순 합계와 표상의 합계 값이 불일치할 수 있음).

16) 한명숙 의원 대표 발의안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0%, 2014년 6.5%, 2015년 7.0%,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업교부금의 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안의 경우,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여건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특성화 교육의 개선 및 육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부하도록 했다.

대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고등교육정책 역시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중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이 심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또, 두 정부 모두 국립·사립대학을 동일하게 경쟁시킴으로써 표방과는 달리 특성화발전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비전과 방향으로 추진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정책사업 등 3가지의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새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학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대학자체의 경쟁력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에 목표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첫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지속적·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고, 관련정책 수립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조례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 및 수도권 대학 편중지원 해소를, 셋째, 국립·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차등원칙 적용을 각각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인 재정 확보방안 마련을 주장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등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거시적 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국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 구체적 정책 사업들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의안번호 1900024, 1900345).
-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 _____. (2006). 「누리사업 성과보고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 (2008). 「‘09년 주요 재정사업 현황 자료집」.
- _____. (2009a). 「‘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 _____. (2009b).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10a).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 _____. (2010b). 국정감사 제출자료.
- _____. (201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통계자료.
- _____. (2012). 「지역대학 발전방안 자료집」.
- 기영석. (2008). 협력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적 발전정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중간평가를 중심

- 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155-182.
- 김병주. (2007). BK21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14(1): 29-50.
- 김수경. (2012).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1-28.
- 김희삼. (2008).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서울: KDI.
- 노무현 후보 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자료집. (2002).
- 류장수. (2012).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누리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1): 113-135.
- 류장수 외. (2007). 「누리사업, 균형발전정책교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 박경호. (2010).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1차 연도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8(4): 63-82.
- 백종국. (2011).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의 질 높이는 미국 대학들. 「교육개발」. 38(3): 54-58.
- 서찬수. (2002).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지역연구」. 18(3): 25-47.
- 신현석 외. (2011).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18(2): 205-234.
- 안민석. (2010). 이명박 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오범호. (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4): 153-176.
- 원용진. (2006). 2단계 BK21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문화과학」46: 262-273.
- 윤덕홍. (2001). 지방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 공청회 자료집」.
- 이승복. (2009). 「누리사업 평가기준 타당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승달 외. (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 임연기. (2009a).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특징과 과제. 「교육연구」23,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임연기. (2009b).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탐색 및 발전적 논의. 「교육행정학연구」. 27(4): 411-435.
- 정영섭. (2003).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한 방향모색. 「사회과학연구」. 16: 245-264.
-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조선일. (2004). 지방분권화시대 지역대학발전방안: 지역대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1(1): 205-228.
- 주철안. (2000). 지식기반경제사회를 위한 지방대학의 실태 분석과 육성 전략. 「지방교육경영」. 5(1): 119-146.
- _____. (200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 평가 및 과제. 「지방교육경영」. 8: 157-173.
-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2782).
- Kwon, Y. S. (2002). *University-Industry Link and Innovative Clust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Michael E. Porter. (2001). *San Diego: Clusters of Innovation Initiative*. Harvard University.
- OECD. (1999). *Manag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 Paris.
- _____. (2010). *Education at Glance 2010: OECD Indicators*.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4. 6. 4, 2006. 4. 26, 2006. 7. 21, 2009. 3.18, 2009. 6. 12, 2011. 5. 6, 2012. 3. 8, 2012. 4. 12, 2012. 4. 13, 2012. 4. 27, 2012. 5. 9, 2012. 5. 10, 2012. 6. 27, 2012. 9. 26).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gion.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

김정희(金正姬): 부산대학교에서 “한국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로 NGO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11년),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NGO학협동과정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시민 사회와 시민운동, 지방자치, 로컬 거버넌스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공동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의 새로운 시도와 한계”(2012),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1), “현 단계 지방분권화의 평가 및 지방분권운동의 중장기 전략과 실천과제”(2010) 등이 있다. 한국NGO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hts21@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How to Nurture Local Univers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Comparing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Carried Out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im, Jung-hee

This study looks into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local university nurturing policies carried out by bot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Lee administration, which had two different visions and directions. To this end, 3 key points are set in the literature review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evious two governments' local university nurturing policies, which are goals and directions of nurturing local universities, action plans, and projects for the policies. The outcome makes it possible to show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that need to be planned by newly launched Park Geun-hye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basic policy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should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balanced development to nurture local universities comprehensively for the long term. Specific tasks are also suggested such as legislating a special act to nurture local universities and a local university nurturing ordinance, generously supporting finance of local universities, resolving the concentration of universities at Seoul metropolitan areas, applying the principle of differentiating the supports for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setting aside the budget for higher level education support up to 1% of GDP.

Key Words: local universities, nurturing local universities, financial support, regional development, balanced development